

5·31 지방선거 D-30

광주·전남 관련 포인트

수번 4011...1평 TV 갖춘 독방 생활
오전 6시 기상 우유 한잔으로 아침

기초단체장 '압승'이나 '兩分'이나

(민주당) (민주당vs우리당)

민주당 완승엔 향후 정계개편 주도권 전략공천자 패배엔 중앙당 비판 직면 현직 교체 여부, 무소속 7곳 큰 관심

30일 앞으로 다가온 5·31 지방선거는 2004년 치러진 17대 총선 이후 2년 동안 민심의 변화를 점검하고 향후 이어질 정계개편에서 광주·전남지역 정치 지형을 가늠할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1980년대 후반 이후 광주·전남지역 선거는 특정 정당의 일방적 승리로 마무리됐으나 이번 지방선거는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이 치열한 한판 승부를 펼치고 있어 유권자들의 관심 또한 높다.

◇승패 분기점=지역 정치권에서는 이번 지방선거를 '심거운 광역, 치열한 기초'로 평가하는 분위기가. 뚜렷한 변수가 없다면 광주·전남지역 27개 시장·군수·구청장 선거를 목표로 내세우고 있지만 내심 20개 지역에서 후보가 당선되면 전체 선거를 승리로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자당 소속의 현직 기초단체장이 후보로 나서는 6개 지역을 포함, 12~13여개 지역에서 당선 후보를 내 민주당과

광주·전남 기초단체장을 양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현직 단체장이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광주 광산·함평·장흥·나주·화순·보성·신안 지역 등은 정당 후보와 현직간 치열한 접전이 예상된다.

◇정계개편 주도권 쟁탈전=이번 지방선거의 '성적표'는 곧바로 정계개편의 밑그림으로 연결된다. 민주당의 압도적 승리로 결판나면 광주·전남 지역 해계모니를 잡고 향후 정계개편에서 주도적 위치에 서게 된다. 무소속으로 당선된 후보들도 자연스럽게 민주당 세력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하지만 열린우리당과 무소속이 선전하고 민주당이 기대만큼 성적을 못 내면 민주당은 지역당이란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거대 정당에 흡수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열린우리당은 민주당의 일방적 승리를 저지하기 위해 광주·전남에서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전략공천의 성공 여부=민주당은 광주 지역 3개 구청장 후보를 전략공천했고 열린우리당은 광주시장 후보 선결과 관련, 변경된 형태의 전략공천을 추구하고 있다.

이같은 공천 방식은 그동안 각 당이 추구해오던 상향식 공천의 틀을 깬 것이어서 논

1월~31일	당정합의 및 당형교류 공직선거법안 30일부터 선거일까지
12~18일	선거인명부 작성, 부재자신고, 부재자신고인명부 작성, 선거일전 2주간 투표권자 2주간
19~17일	후보자등록신청(지방의원선거는 후보사-호주사제지정 선거일전 2주간부터 2주간)
~20일	선언제보, 부재자명, 재직명 변경등록, 투표권자 등록, 투표사실등록 2주간
~22일	선언제보 일부, 부재자등록 및 변경등록, 투표권자 등록, 투표사실등록 2주간
~23일	재직명 변경등록, 재직명 변경등록, 투표권자 등록, 투표사실등록 2주간
24일	선거인명부 확정, 선거일전 2주간
~25일	후보자등록 신청(지방의원 선거공보 등) 선거일전 2주간부터 2주간
31일	후보오명사-호주사제지정, 개표, 선거일
~10일	선거결과 보충투표, 선거일후 2주간
~30일	7개교관할 및 공직선거법 개정, 선거일후 30일 이내 선거결과 보충투표, 선거일후 30일까지
7월	선거결과 보충투표, 선거일후 30일 이내

란이 되고 있지만 중앙당에서는 선거 승리를 위한 결단이었음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지역에서 전략공천자들이 패배할 경우 풀뿌리 민주당주의를 거스른 중앙당의 행태가 비판의 도마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한나라당 선전 여부=이번 지방선거에서도 한나라당은 지역민들의 관심 밖에 있다. 하지만 내년말 대선을 앞두고 호남표가 절실한 한나라당 입장에서 이번 선거에서도 3% 내의 저조한 득표율을 보일 경우 대선 승리를 장담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한나라당은 이번 지방선거를 대선 전초전이라 생

각하고 호남표 공략의 기초를 다질 것으로 전망된다. 만일 한나라당 광역단체장 후보가 5~10%의 득표율을 얻을 경우 호남지역에서 대선 득표율 상승을 기대하며 보다 공격적인 호남공략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아직까지 광주시장 후보도 확정하지 못하는 등 호남 공략에 당력을 집중하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현역 단체장 교체 폭=시·도지사를 포함 광주·전남지역 29개 현역 단체장 중 이번 선거에 불출마한 경우는 3선 연임 제한, 경선 패배, 상위단체장 도전 등을 이유로 한 모두 6명이다. 따라서 일단 6명의 단체장은 교체 확정됐다. 선거전에서 절대적 우위에 있는 현역단체장 교체폭도 관심거리다. 지역정계에서는 이들 6명 외에 5~7명 정도가 교체될 것으로 예상돼 교체율은 40%대에 이를 것이라 관측이다.

◇투표율 얼마나 될까=지난 2002년 6·13 지방선거 당시 48% 가량이 그쳤던 투표율은 여당이었던 민주당의 참패 요인으로 꼽혔다. 민주당 지지가 상대적으로 높았던 젊은 층을 투표장으로 끌어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투표율이 낮을 경우 20~30대의 지지자가 많은 열린우리당이 불리하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후보들은 일반 지지도 보다 적극적 투표 참여층 지지에서 열린우리당보다 훨씬 높게 나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큰 격차가 나타나지 않는 박빙지역의 경우 이 투표율이 확실한 변수가 된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정몽구회장 수감 4일째

지난달 28일 밤 범인의 구속영장 발부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은 자신의 이름 대신 '4011'이라는 수번을 가슴에 달고 1평 남짓한 독방에서 옥중 생활을 보내고 있다.

이날 밤 아반떼 승용차 편으로 경기도 의왕시의 서울구치소에 도착한 정 회장은 자신의 몸에 익숙했던 양복을 벗어 영치한 뒤 연두색 수의를 입고 일반 재소자와 다름없이 입소절차를 밟았다.

간단한 신체검사와 사진촬영을 거쳐 구치소내 규칙을 간단히 교육받은 정 회장은 자정께 교도관의 안내를 받아 구치소 건물 3층에 위치한 독방에 입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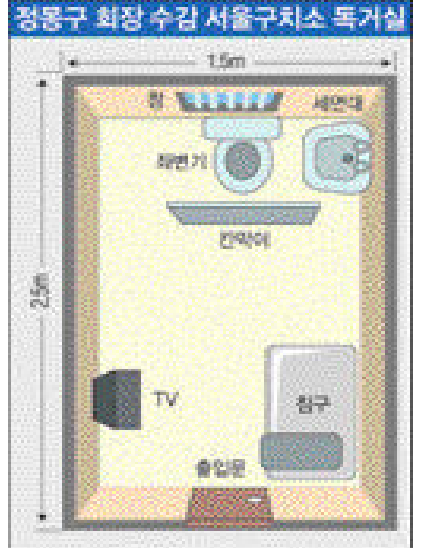
정 회장은 만 68세의 고령인 데다 혈압도 높은 것으로 알려져 병사(病舍)에 수감될지도 모른다는 관측이 있었으나 구치소내 건강검진에서 큰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는지 일반 사동에 수감됐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구치소로 향하던 길에 침뿜은 모습을 보였던 정 회장은 입소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내내 굳은 표정이었다고 서울구치소 관계자는 전했다.

교정 시절의 일일시간표에 따라 오전 6시 20분께 불편한 잠자리에서 눈을 뜬 정 회장은 구치소에서 제공하는 식사 대신 팩우유 1개로 끼니를 대신했다.

구치소에서 제공하는 식사가 입에 맞지 않아서 아니라 사회에서도 평소 아침식사를 우유 한잔으로 대신하는 식습관 때문이라는 게 구치소측 설명이다.

정 회장은 앞으로 교정시절이 정한 일정에 맞춰 수감생활을 해나가야 하지만 아직까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수사가



정몽구 회장 수감 서울구치소 독방실

종결되지 않아 당분간 서초동 검찰청사에 불려가 조사를 받으면서 보내는 시간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검찰이 지난 주말에는 소환하지 않아 정 회장은 변호사 접견과 가족 등의 면회를 하면서 소일했다. 정 회장은 지난달 29일 오후 구치소를 찾아온 아들 정의선 사장, 회사 임원들과 면회를 하기도 했다.

정 회장은 구치소 일과에 맞춰 오전 6시 20분께 기상해 하루 세 번 국과 2가지 반찬이 곁들여진 식사를 하며 오후 8시 20분에 취침한다. 정 회장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사이 하루 1차례 10~15분 간 외부인의 면회를 받을 수 있으며 변호인의 접견은 횟수와 시간 제한 없이 가능하다. 특별면회를 통해 30~40분 간 외부인 접견이 가능한 만큼 그룹의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정 회장이 직접 결정하는 이른바 '옥중 경영'도 할 수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사학법 "양보" 권고에 "불가" 당론 與, 盧대통령에 반기?

노무현 대통령이 사학법 개정을 둘러싼 국회 파행 사태와 관련, '여당의 양보'를 권고했지만, 열린우리당이 '양보 불가' 당론을 재확인해 여론내 불협화음이 노출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여당이 대통령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결과를 초래해 대통령 국정장악력에 흠집이 생기고, 여권내 정책 결정과정의 난맥상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불협화음이 당장 당청간 충돌 사태로 비화되지 않을 전망이다. 초당적으로

국정을 총괄해야 하는 대통령과 5·31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있는 당의 입장 차이에 기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파성 사안으로 끝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또한 '여당의 양보'를 해법으로 제시한 노 대통령의 이번 언급은 임기 후반기 국정운영 기조를 '안정'을 우위에 두고 이끌어 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사학법안을 염두에 둔 노 대통령의 '여당 양보' 언급은 사전에 열린우리당 지도부와 조율을 거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29일 청와대 조정은 국회교섭 상태에 안타까움을 갖고 있던 노 대통령의 판단에 따라 이병완 청와대 비서실장이 28일 오후 김한길 열린우리당, 이재오 한나라당 원내대표에게 전화로 초청의사를 전함으로써 이뤄졌다.

하지만 노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여당의 양보'를 촉구할 것으로는 여당 관계자들이 예상치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노 대통령의 이번 조전 회동 '권고'에 대해 과거 패러다임식으로 여당 총재를 겸했던 대통령이 여당 원내대표에게 원내전략을 '지시'한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여당이 사학법 협상에서 양보하는 결단을 내렸다면 모르지만, 여당이 '양보 불가' 당론을 재확인함으로써 여권내 조율이 매끄럽지 못했다는 지적이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사학법 개정과 관련, 여당의 양보를 요청한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열린우리당 김한길, 한나라당 이재오 원내대표와 청와대 안을 산책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립학교 개혁 본부·전교조 "사학법 개정 저지 투쟁"

45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사립학교 개혁 국민운동본부(사학국본)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지난달 30일 "열린우리당이 의원총회에서 사립학교법 개정 불가 당론을 버리고 당 지도부에 결정을 위임했다"며 사립학교법 개정 저지 투쟁을 선언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긴급대표자회의를 열고 "앞으로 사립학교법 개악을 저지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학국본과 전교조는 지난달 29일부터 열린우리당 중앙당사에서 진행 중인 철야농성투쟁을 이어가는 한편 1일 오전 국회 앞에서 항의 기자회견을 열고 오후에는 긴급 규탄집회도 개최키로 했다. /연합뉴스

LOUIS VUITTON

Sold exclusively in Louis Vuitton stores. Tel. 02-3479-1854 www.louisvuitton.com